



2020. 행정실장 회의자료

2020. 4.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2020. 행정실장 회의자료

I 목 적

- 각급 학교 행정실장의 역할과 책무성 제고
- 교육행정 정보공유와 소통의 기회 마련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 연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제고

II 개 요

- 일시: 2020. 4. 20.(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전달교육 실시

※ 총무과-4556(2020. 3. 1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지침 안내(6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영어체험학습센터 행정실장

- 학교급별 인원

(단위: 명)

급별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국·공·사립 고, 특수학교	계
			공립	사립	소계			
인원	6	74	31	9	40	1	33	154

- 주요내용: 책자 배부를 통한 전달 교육

- 2019.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 교육
- 직무관련 전달 교육

※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 예방 교육 포함

목 차

I. 전주교육 실천방향	3
II. 청렴교육 자료	
- 감사 주요 지적사례	7
III. 전달교육 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주요 개정 사항	23
2. 목적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	29
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35
4. 우리 청 관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방안) 안내 ...	37
5. 재난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인하 안내 ...	39
6.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안내	42
7.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교육시설사업비 집행 안내 ...	43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항 신설 ...	44
9. 음주운전 예방(제로화) 종합대책에 따른 불이익 강화 ...	47
10.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이해	48
11. 청탁금지법(학교 관련) 교육부 질의 및 답변 사례 모음 ...	50
12.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80
13.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갑질) 근절 및 예방 교육 ...	82

I. 전주교육 실천 방향

비전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

교육지표 자치와 존중으로 따뜻한 민주시민 육성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dark gray diamond shape in the center. To the left of this diamond, there is a cluster of smaller, overlapping diamonds in various shades of gray, creating a geometric pattern. The rest of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color.

II. 청렴교육자료

감사 주요 지적사례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이명숙 ☎ 270-6025)

[시설계약 분야]

○ 보험료 정산

-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 ◆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를 보험료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업장별로 가입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분)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공사명)으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 ※ 산재·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면 잔액 부족분은 회수 할 수 없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회수 조치)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사례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당해 공사장이 표기된 보험개시통지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여 공사비 105,230원(제비율 포함)을 과다 지급

○ 환경관리비 정산

<p>◆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p> <p>※ 정산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기타 각종 사진 등</p>
<p>▶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p> <p>▶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p>

사례 1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출된 환경관리비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정산서를 청구하지 않고 준공금 전액 지급.

○ 폐기물처리비 확인

<p>◆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 등)를 확인</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p>

사례 1

폐기물처리비를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계량증명서만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의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대가를 전액 지급

○ 경미한 건설공사 계약

◆ ○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 공사
- (제외) 가스시설공사, 철강재 설치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

※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경미한공사)만으로도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사례

‘다목적실 방음벽 공사 및 방송실 방염타일 카페트 공사(계약금액: 4,400천 원)’를 집행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경미한 공사)이 없는 업체와 계약 시공

○ 공중에 부합한 자격 소지자와 계약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소지자와 계약

◆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금액기준에 관계없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해당 자격업체와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례

CCTV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정보설비공사’ 중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CCTV 녹화 시스템 설치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

[회계 · 지출 분야]

○ 피복비 집행 부적정

- ◆ ○ 피복은 업무성격 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 지급하여야 하고, 본래 용도에 맞게 구입하여야 하며 개인 목적의 의복구입은 금지하여야 함
 - ◆ ○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함
-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사례

피복비 지급대상자는 작업복을 구입하면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 목적의 의복(재킷)을 학교법인카드로 구입하였고, 지출담당자는 실제 구매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신사정장으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받아 지출함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 ○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신용카드사용 시 집행 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함
-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사례

2016학년도 1학기 교직원 간담회 외 1건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임에도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고, 교직원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품의 금액 한도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품의금액(1,200,000원)보다 28,000원 초과하여 1,22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교직원 참석자 명단에 병가로 실제 참석할 수 없는 대상자 2명을 기재하여 실제 참석한 인원의 집행금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함.

○ 근무지내 출장 여비

- ◆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 ◆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출장 여비는 실비로 지급
 - 실비 상한액: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 가능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사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아 총 1,140,000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근거리 출장(왕복 2km)에 해당하는 수용교육 학생인솔 건에 대하여 운임 등 실비 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830,000원을 과다 지급

○ 지도 수당 지급 소홀

- ◆ 방과후 수업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실제 수업을 실시한 시수 등을 근거로 지급하고 출장·휴가·병가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전라북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사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015~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태권도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운동부(태권도)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 출장으로 태권도 지인(태권도 사범) 및 체육교사에게 수업을 대체하도록 한 후 해당 시간에 본인이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관련 서류(출근부)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방과후 지도수당 8,131,000원을 지급

○ 학교신용카드 사용관리

- ◆ 신용카드사용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해 의사 결정(품의)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함
-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사례 1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8. 4. 16.일 기준 법인카드 계좌에 학교회계에 반납 조치할 금액 11,950원, 업체에 지급해야할 금액 454,500원을 별도의 확인 및 조치 없이 관리하고 있었고, 카드이용 청구예정금액이 895,921원 부족하게 관리

사례 2

2017년도에 매년 1회 이상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카드 포인트를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까지 보고(결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인건비 분야]

○ 휴직 시 보수 지급

◆ ○ 육아휴직 수당

- 육아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 월중 휴직에 따른 보수지급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

◆ ○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미지급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월 째 해당 월의 ‘보수지급일에 합산’ 하여 일시불로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7월 째 퇴직, 휴직 중이더라도 7월 째 보수지급일(17일)에 복직합산금을 지급해야 함.

◆ ○ 질병휴직 중 보수지급

- 질병휴직자가 호봉제 적용자일 때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이면 봉급 7할을 지급하고, 1~2년이면 봉급 5할을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사례 1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장 실시한 교사에게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8,5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정근수당 지급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휴직기간)을 감액하지 않아 정근수당 418,570원을 과다 지급

사례 2

육아휴직('16. 3. 14.~'18. 2. 28.) 시작 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여 1,462,630원을 과다 지급

사례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3,010,390원을 감사당일 현재까지(7개월째) 지급하지 않음.

사례 4

1년을 초과한 질병휴직 기간의 급여를 7할(정당: 5할)로 일할계산하여 377,040원을 과다 지급

○ 초과근무

◆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 산정 시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 초과근무 명령

- 초과근무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 15조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사례 1

시간외 근무 산정 시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나, 1시간미만의 조기출근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450,030원을 과다 지급

사례 2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초과근무 명령사항에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 42건에 대하여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반복 기재하는 등 초과근무를 부적정하게 신청

○ 교육연구비

- ◆ 공립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비는 교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직·직위해제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교육연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학교로 파견된 교원은 교육연구비 지급이 가능하며, 학교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시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가능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례

교사의 파견기간('16. 3월~'16. 2월)에 교육연구비 840,000원을 지급하였고, 질병휴직 기간('17. 3월~'18. 8월)에 교육연구비 684,000원을 지급

○ 담임업무수당

- ◆ 학급담당 교원에게는 월 130,000원의 교직수당(가산금4-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례

교사의 휴가기간 동안 대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도, 휴가중에 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 385,670원을 중복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보수 지급일에 자녀 1명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보수 지급일에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다자녀가정 학교감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았음에도 소속기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를 제출하여 3,353,400원을 과다 수령

○ 정기호봉승급

- ◆ ○ 정기승급 대상 및 요건
 - 재직중인 공무원이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 유의사항
 -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사례

질병휴직('16. 3. 1. ~'18. 2. 28.)기간 중 승급 제한 기간인 휴직 시작일 (2016. 3. 1.)에 정기승급 처리하여 인건비 768,220원을 과다 지급

○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 ◆ -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1년 가산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계산된 환산율의 8할 인정
- 시간강사 경력은 근무 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에 산입
- 경력과 경력이 중복 될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를 인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사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호봉을 획정하면서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력은 계산된 환산율의 8할을 인정하여야 하나 10할을 인정하여 1,081,86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유리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하여야 하나 중복되는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1,604,420원 과다 지급하였으며,

대학원 경력이 계절제 대학원이므로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하나 2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여 666,020원 과다 지급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은 80%로 인정하여야 하나 50%만 인정하여 647,400원을 과소 지급

[기타]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잡종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약제교원 등의 법정 부담금(4대 보험료 등)은 다음연도 정산시기에 초과 납부한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반환조치 하여야 함.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8조

사례

계약제교원 등의 법정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으로 관리하면서 2016.~2017. 초과 납부한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589,770원을 반환하지 않고 2018. 6. 4. 감사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 물품 관리

- ◆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며,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사용하지 않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등 불용결정 대상 물품은 수시로 조사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고, 비소모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9조, 제16조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정수관리 지침」

사례

정수물품인 비디오 프로젝터(2종)에 대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득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2000년대 이전 보유물품 운동시설물 외 94종(108,068천 원)을 불용처분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2015.~2017.에 구입한 속도측정기 외 3종(1,348천 원)을 회계연도가 지난 감사당일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당 시설에 보관함.
◆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사실을 보사하고 의견을 붙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물품 훼손 및 분실 시, 변상금은 현금으로 하고,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9조, 제87조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사례

방송반 업무를 위해 구입한 비디오 캠코더(정수물품)를 방송반 담당 교사의 보관 소홀로 망실하였으나, 감사 당일까지 변상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학교발전기금 공개 소홀

◆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는 1개월 이내에 공개
◆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 발전기금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및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19. 3. 1. 시행)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사례

2016~2018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관리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발전기금 접수(기탁일자, 기탁자, 사용용도,

세부내역, 금액 등)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학교운동부 운영 소홀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전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통해 학교체육의 교육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①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동부 운영비 관리에 관한 사항 ③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코치·일반코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 투명한 운동부 예산의 집행을 위해 학교운동부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를 정보공개통합홈페이지(<http://open.jbe.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전북도교육청)」
-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

사례

2015~2018학년도 운동부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훈련경비, 대회경비, 후원회 경비 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지 않았으며,

2015~2018학년도 현재까지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계획 및 결과를 정보공개통합홈페이지(<http://open.jbe.go.kr>)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III. 전달교육

1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주요 개정 사항

(행정지원과 최재진 주무관 ☎ 270-6032)

□ 관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19. 8. 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2019. 12. 3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 [총무과-611(2020. 1. 10.)]

□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 (여성공무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

< 현 행 >

임신기간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개 정 >

휴가일수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현행과 동일)

- (남성공무원)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 부여

○ 임신검진휴가 분리·신설(제7조의7제10항·제11항)

- 생리기간 중 휴식 또는 임신검진 필요시 매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 사유를 분리하여 별도 휴가로 명칭 변경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0일의 휴가 부여

현 행(조례 표준안)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회, 유급)

⇒

개 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제7조의7제9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현 행		개 정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출장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제1조의2제2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출장 개념* 명시, 기간 엄수 및 기간 변경시 지체 없는 보고 등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

-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감사기구의 후속 조치 실시
- 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 연가저축제 도입, 장기 연가사용 보장(제7조의10 및 제7조의11)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

* 권장연가일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가 미보상 대상에 해당

- 저축연가 등을 사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 연가사용권장제 관련 조치 기간 확대 등(제7조4 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	
기간	조치	기간	조치
~3.31.	▶ 사용해야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3.31.	▶ 사용해야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 <u>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u>
7.1.~7.15.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공지 후 소속공무원이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	6.1.~7.31.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공지 후 소속공무원이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
~9.30.	▶ 소속공무원이 연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지한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0.31.	▶ 소속공무원이 연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지한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연가 가산 제도 개선(제7조제3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다음 해 1일의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교육 훈련을 위한 파견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

*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제5호 규정에 따른 기간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연가 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제7조의8)

- 연가의 경우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현행	휴가 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	↓	
개정	<u>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u>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 규정 정비(제7조의9, 별표2)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공휴일 산입

시선택제 현행	휴가 일수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	↓	↓
시선택제 개정	<u>연가를 제외한</u> 휴가 <u>기간</u>	<u>30일</u> 이상 계속되는 경우	<u>근무하지 않는 날,</u> 토요일, 공휴일 산입

- 시선택제 공무원의 연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동일한 근무기간별로 수식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연가시간 산정
- 시선택제 공무원의 권장연가시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quad \frac{\text{제7조4제1항에 따른 지자체별 권장연가일수}}{\text{시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times 8\text{시간}$$

□ 특별휴가 종류별 내용

휴 가 명		대 상(또는 요건)	종전	개정	비고
유·사산휴가		(여성) 유·사산의 위험이 있을 시	날부터 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규정 제7조의7④
		(남성) 배우자의 유·사산 시	-	3일	규정 제7조의7⑤
난임치료휴가		명칭 개선 및 난임치료 시술일	당일포함 2일	-	규정 제7조의7⑥, 조례 제23조⑫
모성보호시간		휴식이나 병원진료	임신 12주 이내, 36주이상	임신 전(全)기간 (1일2시간)	규정 제7조의7⑦
육아시간		육아시간 확대	1일 1시간 (생후1년미 만 자녀)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만5세이하 자녀)	규정 제7조의7⑧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재학중인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공식 행사(상담) 참여 (병원진료, 예방접종 사유 추가)	2일 (2자녀 3일)	3일	규정 제7조의7⑨, 조례 제23조⑮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 중 휴식을 원할 시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규정 제7조의7⑩
임신검진휴가		(여성) 임신기간 중 검진	-	10일	규정 제7조의7⑪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없음	15일	조례 제23조⑬, 운영지침
학습휴가		1회 사용 가능 일수	1회 1일	1회 3일	조례 제23조⑭, 운영지침
자녀보육휴가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부부합산)	-	5일	조례 제23조⑯ 신설
입영동행휴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입영 당일	-	1일	조례 제23조⑰ 신설
경조사 휴가	출산	배우자	5일	10일	규정 제7조의6①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3일	조례 제23조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3일	조례 제23조①

□ 자주 묻는 질문

Q.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은 없는 것인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재난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각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및 업무공백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의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
-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 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

Q. 육아시간의 24개월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육아시간은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부 각각이 24개월의 범위내 사용할 수 있으며,
-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할 사용 가능

(재정협력과 김양균, 김유진 주무관 ☎ 270-6162, 6163)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가. 대상 사업

-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
- 사업이 시행 중에 있거나 일부 예산만 확보된 사업으로서 시급히 완성을 요하는 사업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 기타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
 - ※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의 세부사업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이 해당됨
- 건당 1억원 초과 시설공사
 -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예산 편성 후 집행

나. 지원 기준

- 교육시책 사업
 - 해당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 물품(용역) 구매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서 정한 기준단가 범위 내 지원
 - 유사한 물품(용역) 등의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 적용 지원
 - 위 기준단가 등에 의하여 지원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 시설사업

-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 또는 원가계산서 적용
- 유사한 공사의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적용
- 위 기준단가 등에 의하여 지원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 기타사업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 등 적정 수준 지원

다. 지원 절차

특별교육재정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학교)장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필요한 기관(학교)은 본청(교육지원청)의 당해 사업 해당 실·과에 신청
↓		
사업타당성 검토의견 제출	실·과장 (교육장)	○ 신청을 받은 해당 실·과(교육지원청)는 당해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과로 신청
↓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예산과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예산(안) 확정 및 재배정	교육감	○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 후 해당 실·과(교육지원청)로 예산 재배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실·과장 (교육장)	○ 예산을 재배정 받은 해당 실·과(교육지원청)는 신청 학교로 동 예산 교부 및 집행 등 사후 관리

라. 행정 사항

- 예산의 지원목적에 따라 집행하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불가하거나 필요가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납 처리
- 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라 집행완료 후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 처리
 - 당초 지원목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위해 집행 잔액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 잔액 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집행결과 보고 : 예산 집행 후 10일 이내 보고

□ 우리 청-전주시청 교육환경개선사업(1:1대응투자)

가.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제3536호, 2019. 4. 19.)」
- 「전주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서(2014. 10. 6.)」
-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협약내용: 우리 청과 전주시간 2015년부터 각 4억원씩 1:1 대응투자

다. 지원대상: 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라. 주요내용

- 학교별 1개 사업으로 제한
- 신청한도액: 금20,000만원 이하
- 사업범위: 학교 시설개선 등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제2조로 정한 사항

-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마. 선정기준

- 학교별 순환배분 지원
 - 2019년 지원 학교 가급적 배제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반영
- 학생들의 안전확보 등 시급성, 중요성을 요하는 사업에 가점
- 관내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배려
-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된 시설 사업
-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설치 사업
- 기타 학교 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
- 우선순위는 학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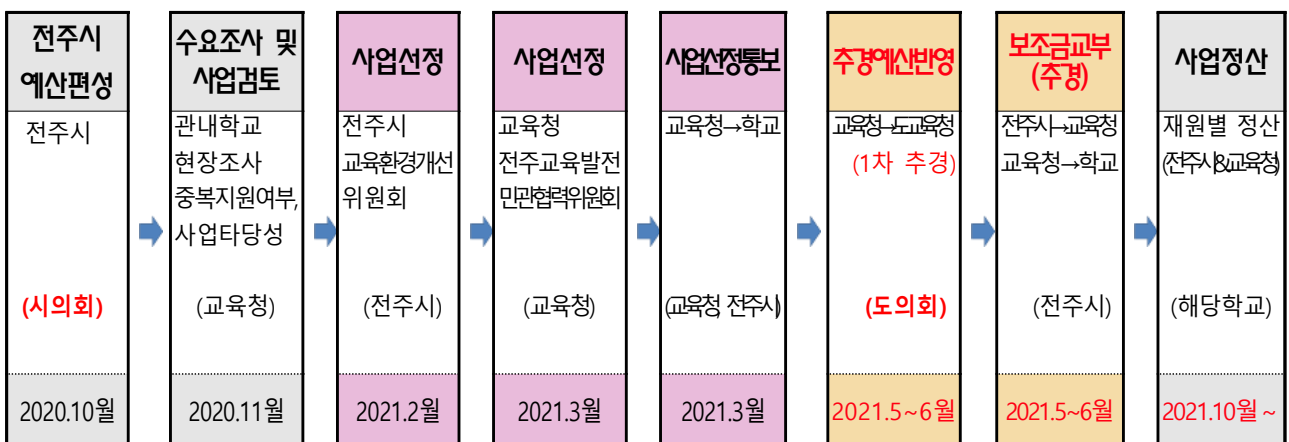
바. 선정방법

- 전주시 보조금: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 우리 청 교특회계: 우리 청에서 주관하는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사. 2020년 지원대상학교: 신청 61교 중 우선순위 42교 지정 통보

-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2020. 2. 17. / 20교, 4억원
- 우리 청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2020. 3. 12. / 22교, 4억원

아. 2021년 사업 선정 절차(예정)



자. 행정사항

-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요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하고, 중복 신청 또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완료 시 우리 청에 반드시 보고**
- 신속한 재정 집행 추진하시되, 2020.11.30.까지 집행 및 집행 결과보고 완료
 - (전주시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전액 반납
 - (우리청 지원) 집행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반납

□ 학교 여건개선사업

가. 지원근거 및 기준

- 2020년도 지역교육청 여건개선사업 반영(예산과)
- 2020년도 본예산 확정(2019.12.13.)
-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기준단가

나. 지원방법 및 시기

- 학교별 총액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년 초 조기 교부

다. 신청대상사업

- 강당 신축 등 시설 변경에 따른 새로운 수요발생으로 인한 사업
- 일부 학교만의 특수한 사업으로서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사업

라. 신청제외 대상사업

- 자체재원(학교회계 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 물품 등
 - ※ 노후 복사기, 컴퓨터, 책걸상 교체, 사무기기 및 학습용 영상장치 교체 등
-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
- 학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인건비성 경비
- 도교육청 각 실·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 등

○ 학교시설사업(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등)

마. 행정사항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지정 사업비는 그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
 -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 발생 할 경우 집행 잔액 반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일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반납
 - ※ 목적지정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반드시 교육지원청 사용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 사업예산은 2020년 12월 말까지 집행하시고 집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 보고
- 사업 예산 지원목적에 따라 집행하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민간단체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

(재정협력과 이수연 주무관 ☎ 270-6154)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 및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우선구매 제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적극 활용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활성화를 위한 **꿈드래 쇼핑몰**
 - 전국 품목별 중증장애인생산물 및 생산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물 전용 구매시스템
 - 꿈드래 쇼핑몰 : <https://www.goods.go.kr>
- 나라장터 및 학교장터를 이용한 중증장애인 생산물 간편 구매
 - 학교(기관)별 이용 편의에 따라 나라장터 또는 학교장터에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 접근성이 용이하게 구현되어 있어 우선 구매 가능
- 구매 가능품(예시)

구 분	수요기관 구매 가능 품목	비 고
중증장애인 생산물	사무용지류, 화장지, 재생토너, 문서파일류, 행정봉투, 커피류, 비누, 현수막, 인쇄, 물티슈, 판촉물, 가구류, CCTV, LED 조명기구, 컴퓨터 등	G2B, S2B, 꿈드래

붙임 전북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1부

【붙임】

전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30개소)

기준: 2020.2.28.

구 분	시설명	생산품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지정번호)
판매시설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도내외 생산물품 납품 가능	익산시 익산대로27길 132	856-2646	전지역배송
생산시설 (29개소)	신흥URG사업단	수문,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2-13	070-7715-2349	2019-038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	물티슈	전라북도 김제시 갈공길 28	063-543-2580	2012-051
	반디누리작업장	두부류, 채소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	063-322-9907	2012-058
	바다의 향기	해조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	063-583-0035	2012-049
	완주군희망발전소2호점	해조류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654	063-262-9115	2014-024
	(사)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수문,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신기길 6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063-262-6424	2017-030
	완주군희망발전소1호점	현수막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16	063-262-1600	2009-006
	완주떡메마을	떡류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상봉로 920	063-263-8242	2012-002
	행복한집	망사포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93-4	063-263-0493	2016-058
	(사)꿈드래장애인협회 꿈드래작업장	CCTV,배전반·제어장치, 전광판, 조명기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07-45	063-261-7023	2017-050
	(사)체육장애인자활협회	인쇄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공취팔쥬로 1006	063-231-4646	2018-009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배전반·제어장치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농공단지길 27	063-861-1600	2017-055
	해피드림	제과제빵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길77	063-839-5491	2011-051
	동그라미플러스	공예품, 육류가공품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	063-831-7350	2009-008
	익산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	전라북도 익산시 악촌로 22	063-838-7748	2016-065
	임실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1	063-643-8653	2018-054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웅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063-351-9919	2017-006
	기린보호작업장	사무용지류, 쇼핑백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10-3	063-244-6479	2012-005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인쇄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상리2길 17, 4동	063-714-3967	2015-016
	더불어삶	화장지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37, 2동 1층	063-214-0789	2018-004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동사업본부	피복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10	063-275-0089	2010-014
	기린보호작업장	재생토너카트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연신로 20	063-244-6479	2017-071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중앙사업단	인쇄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236	042-632-0996	2017-007
	동암자활자립장	두부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75	063-226-6589	2011-070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인쇄물, PE봉투(비닐봉투류), 행정봉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277	063-227-9944	2009-001
	자애자립장	버섯류, 비누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52	063-536-1444	2009-007
	굿데이	제과제빵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7	063-433-7070	2017-001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 연합회 중전기사업단	가로등주, 배전반·제어장치	전북 군산시 외항로 931	063-464-8781	2019-001
	(사)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인쇄사업단	인쇄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7길 10-6	063-278-5978	2019-016

※ 전국 생산시설 지정현황(2020.2월): 629개소(전북 29개소)

(재정협력과 김경호 주무관 ☎ 270-6167)

□ 관련

- 재정협력과-1843(2019.2.7.)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 회의 개최」
- 재정협력과-1745(2019.2.1.), 재무과-2012(2020. 1. 29.)

□ 우리 청 관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 우리 청 관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 사용 현황
 - 2020. 2월말 현재, 21개교 63건임(지자체 62, 국유지1)
- 공유재산 점유 · 사용문제점
 - 공유재산 관리(학교) · 사용(지자체) 체계 이원화로 안전관리 문제
 - 지자체는 예산 편성 등 이유로 매입에 소극적

□ 해당 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 처리 절차

- 점유실태조사
 - 점유자 인적사항, 점유목적, 사유, 기간, 면적 등 상세 조사
 -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예정 고지
 - 대부(사용허가) 불가 시 명도 촉구
- 현황 · 경계측량
 -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
 - 측량 시 점유자 입회 안내
- 변상금 사전통지
 - 산출내역, 분할납부 신청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 산정방법: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120%×점유기간(최장 5년)
 - 대부(사용허가) 안내 또는 자진 명도 촉구
 - 의견 제출기한 부여(20일 이내)
- 변상금 이의신청 처리
 - 이의내용 2인 이상 조사

- 제출의견이 정당한 경우 변상금 수정 통지
- 제출의견이 이유 없는 경우 “이유없음” 문서 통보
- 변상금 확정 부과
 - 납부기한: 60일 이내
 - 변상금 확정 부과 고지 후 무단점유자의 이의 제기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 지자체에 매입요구 공문발송 및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관리·사용체계를 문서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기대효과

- 우리 청 관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재정 확보 계기 마련 및 교육행정 신뢰도 향상
- 지자체-시의회-해당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 노력

재난[감염병]에 따른 공유재산[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대부]료 한시인하 안내

(재정협력과 김경호 주무관 ☎ 270-6167)

□ 추진배경

- 재난(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액
-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500968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4조
- 재무과-5174(2020. 3. 9.), 재무과-7725(2020. 4. 9.)

□ 사용(대부)료 인하내용

구분	적용대상	인하기간	인하율	비고
재난 기간 중	사용한 자*	’ 20. 1. 20.(주의단계 발령 시) ~ ’ 20. 2. 29.	현재 요율 5% → 1% 적용	시행령 개정 전 사용(대부)자 및 신규 계약자, 채납자 모두 포함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한 자**	개학 시 ~ ’ 21. 2. 28.		

※ (위기단계별 발령) 주의(’ 20. 1. 20.), 경계(’ 20. 1. 27.), 심각(’ 20. 2. 23.)

* (사용한 자)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한 자) 시설폐쇄 명령·휴교(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후 시설
폐쇄 명령 등이 해제되어 사용한 경우

※ 대부도 같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만큼 “연장” 또는 “면제” 가능

□ 사용(대부)료 인하에 따른 계산방법

- 입찰(수익)로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았고, 피해지원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대부)료는 인하 기간에 따른 적용 일수를 고려하여 산출

□ 사용(대부)료 인하에 따른 정산·환급방법

○ 1차연도 사용(대부)료 정산 및 환급

- 2020학년도 학교회계의 경우 과오납 반환을 추진하고
- 2019학년도 학교회계는 이미 완납된 경우는 추경예산(반환금편성), 예비비 등을 통해 환급 재원 마련

○ 2차연도 이후 사용(대부)료 조정, 산출, 갱신

-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대부)료 산출, 사용허가(대부) 갱신에 따라 사용(대부)료 산출 등은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

□ 해당 학교의 업무절차

○ (대상자 파악) 학교(기관)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 받은 자 중 대상자 파악

※ 경작용, 주거용, 폐교재산 대부자는 적용 불가

○ (인하신청 안내) 파악된 대상자에 대해 인하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

○ 인하대상자에 대한 증빙자료

- 인하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①사용료 인하 신청서
(재난감염병에 따른 공유재산매점 및 자판기 등 사용(대부)료 한시 인하 계획 10페이지)
- 인하대상자가 사업자일 경우: ①사용료 인하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소상공인확인서

※ 다만,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생략 가능

(아래 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생략 가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시 종업원수	국세청장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홈택스,국번없이 126)	2019년 증빙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매출액			

※ 소상공인이란? 아래 ①② 모두 충족 필요

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② 평균연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20억 이하	식료품·의복·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
	80억 이하	농업·광업·임업, 의료·시계·종이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50억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30억 이하	부동산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대상자 심사 및 확정)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 심사·확정
- (금액산정)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액 산정
- (결과통보) 심사 및 금액산정 결과를 최종통보

□ 기대효과

- 재난(감염병)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기대

(재정협력과 이현미 주무관 ☎ 270-6168)

□ 관련

- 민주시민교육과-2601 (2020. 2. 20.), 민주시민교육과-3395 (2020. 3. 2.)
민주시민교육과-5471 (2020. 4. 8.)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해당연도 3월 1일자 학생수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 선출 시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신설학교는 개교일 학생수 기준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8호, 2020. 4. 7. 시행],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9호, 2020. 4. 7. 시행]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일정

- 4월 말까지 선출 완료 (전체회의 소집은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공문은 반드시 연수 계획 등을 전달 또는 핸드폰(카톡, 문자)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여 참석 독려
- ※ 미 통보로 인한 민원 자주 발생

(시설지원과 시설1담당 최동수 ☎ 270-6171)

□ 추진 배경

- 초.중.고 개학연기(~4.6.)에 따른 방학기간 축소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 발표(3.17.)

□ 현황 및 문제점

- 방학기간 단축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 가중
- 학기중 공사추진 불가피

□ 학교 협조사항

- 학교별 방학 시기 탄력적 운용 및 주말 활용하여 공사 기간 확보에 협조
 - 냉난방 공사가 계획된 학교는 여름방학을 길게 확보하고 겨울방학 짧게 확보
 - 석면 공사 예정학교는 겨울방학을 확보하고 여름방학 짧게 편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 (일명 민식이법) 신설 [시행 2020. 3. 25.]

(행정지원과 김찬수 주무관 ☎ 270-602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내용

○ 처벌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

○ 처벌내용

-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 유기 또는 무기 징역

→ 공무원은 형 확정 시 **당연퇴직**

- (상해시)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백 ~ 3천만 원

→ 공무원은 형 확정 시 **경·중징계요구(벌금형) 또는 당연퇴직(징역형)**

□ 법령관련 질의·응답

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 3년 ~ 무기징역에 처하나요?

답) 아닙니다.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가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 아닙니다. 12대 중과실과는 별개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한다면 민식이법에 적용 안 받나요?

답) 아닙니다. 속도와 무관하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면 모두 민식이법에 적용받습니다.

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답)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피해 어린이는 보행자로 간주되어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문) 교육지원청 교직원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충격을 가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 어린이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고로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추후 어떤 형사상 불이익과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답) 경미한 과실(10%)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에 해당하므로 민식이법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형량인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 요구 대상이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 출근을 하던 초등학교 교직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안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였지만 신호위반으로 갑작스럽게 피해 어린이가 뛰어 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어떤 형사상 불이익과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답)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등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또는 지방공무원법 61조)에 따라 **당연퇴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 김찬수 주무관 ☎ 270-6028)

□ 강화된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 엄격 적용[감사관-4489(2019. 8. 20.)]

-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이면 ‘중징계’ 요구

※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1% 이상)의 경우 경·중징계’ 요구

□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외

- 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
- 대상: 음주운전으로 견책이상 징계 처분 받은 자
- 내용: 맞춤형 복지 점수 중 변동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부여 제외
- 적용: 징계처분일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적용

□ 도교육청 전입 제한 (3년)

- 대상: 전문직 및 일반직 공무원

□ 음주운전 기관장 연대 책임제 실시

- 기관(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 ‘주의’ 처분

※ 학교 ⇒ 학교장,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해당 국·과장, 직속기관 ⇒ 기관장

- (면책 사유) 음주운전 예방(제로화) 대책 성실 추진 등 소속 교직원의 음주운전 예방에 노력했을 경우

(행정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 270-6035)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비교

공익신고 공적 부문 외에도 사적 부문에서 국민의 안전 및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제도가 운영		부패행위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근거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 적용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대상	• 법 제 2조 제 4호의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및 기업 • 소관 행정·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원 • 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 신분비밀보호 위반자·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 보호조치 불응자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 특별보호조치 불응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 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제재 수준	• 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청(신변보호사실 유출 시 형사 처벌)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 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과태료부과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20억, 최저한도:20만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보상금	•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30억, 최저한도:없음
•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상한액 :2억	포상금	•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지급 * 상한액 :2억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재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	구조금	• 명시적 규정 없음 (보상금으로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 가능)
•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보조금 상환	• 규정 없음

공익신고제도의 주요 개념의 이해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공익신고자등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부 공익신고자

- 소속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
-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행정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 270-6035)

Q1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교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용도(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2조 제2호)

Q2

학교에 근무하는 적용대상자인 무기계약직이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발령 나면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며, 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고 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

Q3

교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시행령상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이 전혀 안되는 것인지?

-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감사·평가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은 업무 수행자의 경우 해당 업무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Q4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는 서로 친구사이임.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사교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비는 학부모가 지불하였음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각 호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이 되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가능한지?

-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제공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5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친구사이는 아니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지나치다 자주 만나는 사이임.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교의 목적(친분을 쌓고 싶은 생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였음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각 호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이 되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의 선물제공은 가능한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6

이전에 근무했던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학교장, 부서장 등)에게 주례를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A.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

-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임

Q7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5조부터 9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인 공무수행사인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A.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Q8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교육정책 현안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만찬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참석자는 시도교육청 간부공무원 27명, 경기도의회 ○○당 대표단 20명)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1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함

Q9

학부모가 오래전부터 친구관계인 담임교사와 식사를 하고 학부모가 6만원의 식비를 계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110~112에서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를 제시하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음식물 수수의 허용여부를 진단하도록 하였음

1단계 :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음

2단계 :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사교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음

3단계 : 학생의 교육·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함

질의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학부모가 오래전부터 친구관계인 담임교사와 식사를 하고 식비를 계산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10

담임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여 학부모가 부의금 5만원을 전달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117~119에서 수수 금지 경조사비 자
가 진단 Check List를 제시하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경조사비 허용여부를 진
단하도록 하였음

1단계 :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음

2단계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함

3단계 : 학생의 교육·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하는 경조사비에 해당함.

질의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 제8조 제3
항 제2호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
비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부친상에 부
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 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11

호텔 멤버십 카드 등 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멤버십 카드를 구성원이 개인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Q12

학교운영위원 외에 학부모 조례에 따라 선출한 학부모 단체임원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인 학부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학부모 단체임원의 경우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임.

Q13

동창회에서 학교장이나 교직원에게 가액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14

학교장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식사장소에 나가보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1인분에 10만원하는 참치회를 제공하였고 특별한 인사 소개도 없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참고로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Q15

A학교 축구부 학부모 2명(회장, 총무)은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교장 및 체육부장과 함께 ○○에서 출발하여 ○○훈련캠프까지 학부모의 차로 운행을 하며, 출발당일 1인당 2만원 상당의 점심과 3만원 상당의 저녁, 4만원 상당의 숙소 및 1만원 상당의 아침을 각각 제공하고, ○○까지 학부모의 차량을 사용하여 운행하였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Q16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0,000원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들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17

금품을 제공하는 자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이고 학생 신분으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생님에게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그저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제공했을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18

A학교장이 학교현안을 시의원에게 설명하고 그 시의원은 A학교사업에 대해 교육청 예산에 끼워 넣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8호),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는 해당 예산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에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19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홍보팜플렛으로 만원 상당의 만년필, 오천원 상당의 수건을 각각 50개씩 가져왔는데 법 위반인지 여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Q20

교사 A가 친구인 학부모 B로부터 매월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인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21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인 ‘1인 1회당 4만원 이하’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예를 들어 내부 직원들 간 업무추진비 집행은 4만원까지 가능하고,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와는 3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내부직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Q22

공무원인 A가 전기업자 B에게 공사계약 후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Q23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동양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4

사업을 하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카카오톡 기프트콘(1만원 미만)을 선물 받음. 현재는 아니나 향후 업무관련자가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기프트콘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25

C업체 대표 C씨는 학교시설 공사를 하는 기계설비 보수업체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B학교 행정실장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인근 학교 등의 시설공사가 있을 때 자신의 업체 소개를 부탁하였다. A학교 행정실장은 학교 보일러실 배수펌프 등이 고장나 기계실이 침수되어 약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시설(배수펌프 교체 및 침수로 인한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히 아는 업체가 없던 A학교 행정실장은 B학교 행정실장에게 C업체를 소개 받아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C업체는 공사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를 하지는 않았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한편,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7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26

공직자등이 관련업체의 배우자로부터 행사 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7

공무원 A씨가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호텔의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직장동료들과 업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비추어 사안의 호텔 숙박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보기는 어려움.

Q28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A가 직무관련자 B와는 연인관계인데 B가 A에게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선물한 경우 법 위반인지?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인 이성 친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Q29

학부모가 직접 만든 선물을 교원이 받은 경우 선물가액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며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금품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함.

Q30

담임이 아닌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 한잔(5000원 미만)을 접대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31

만일 선물 등이 배달되었으나 반환처와 연락처 등이 확실치 않아 거부 의사와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공직자등은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법 제9조 제2항)

Q32

거부의사와 함께 반송했을 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Q33

학부모가 자녀 상담차 학교에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 간식을 들고 오면 교사는 거절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어 일단 거절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동 내용을 신고하고, 금품등을 제공한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8조)

Q34

학부모가 기프트콘으로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냈을 경우, 거부의를 밝힌 후 되돌려주려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되돌려 줘야 하는지(기프트콘의 경우 물품으로 교환해야만 반환 가능한 상태라면)? 또한 반환하고 공무원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학부모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일반인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이 가능할 것임(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참고).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Q35

교내 바자회 행사 때 학부모, 업체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는 것이 법 위반인지?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일반 학부모 등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Q36

유치원에 근무하는 돌봄강사(시간제 근무) 및 각급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는 단시간 방과후 강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A.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돌봄강사 및 방과후 강사가 위에 해당하는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한편, 방과후 강사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각급 학교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비해당)

Q37

약5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계약 업무 처리시 학교장이 행정실 업무담당자에게 타업체에 견적서를 제출받지 말고 자신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 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함

사안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Q38

학교와 거래한 각종 업체로부터 기관대표 명의로 각종 경품 사은품을 제공 받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 경우에도 3만원의 금액 제한을 받는지요? 예)학생단체관람으로 인한 추가 관람권 제공 등

A. 질의의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공직자등은 학교와 거래업체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은 허용됨(제8조제3항 제2호)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인 학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임(제8조제3항 제3호)

Q39

명절이나 인사이동 시 상급자나 업무관련자가 아닌 동료끼리의 선물 및 화환 등도 금지 대상인지?

A.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으므로(인사·감사 부서 등은 예외),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됨(법 제8조제2항)

Q40

기간제 교원이 스스로 재계약을 기관장(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는 경우?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하는 것이 금지되나(법 제5조 제1항),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음(법 제21조)

기관장이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법 제21조)

한편,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재계약 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등의 의미를 갖는 정도이거나, 기관장 또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Q41

부탁을 받지 아니한 교감(다른 교원)이 기관장(학교장 등)에게 A교원의 보직을 부탁하는 경우?

A. 부정청탁금지법 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청탁자가 부탁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5조 제1항 제3호)

Q42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A교원과 친척 관계라고만 이야기 했는데 인사담당자가 A교원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한 경우?

A.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법 제5조 제1항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함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직무는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제대상이 됨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A교원과 친척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경우 제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교원의 전보가 이루어지면, 인사담당자는 형사처벌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Q43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부담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시 교통비·일비만 지급한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한 식비·숙박비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6호)

Q44

교원의 각종 법령상 시험출제위원 활동시 그에 대한 보수에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교원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외부강의 대가제한은 강의, 강연, 기고의 형태에 한정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들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됨(법 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 강연, 기고 형태에 제한되지 않으나 시험출제위원의 활동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음

Q45

교원의 주례시 그에 대한 답례에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지도학생인지 여부 및 졸업생인지 재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들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법 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함
통상적으로 주례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Q46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10만원 상당의 화환(배송료 포함)을 보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47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A.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라 하더라도 작년 담임교사가 사실상 현재 담임교사에게 지도·평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작년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여전히 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Q48

작년에 담임한 학생에게 올해 손수건을 선물로 받음. 올해 그 학생 반에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학사일정,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종업 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임(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음

Q49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을 잘 봐 줄 것을 부탁한 경우 법 위반사항인지?

- A. 인·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함.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Q50

학생이 기한 내에 수행평가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해서 마감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 1) 한 학생이 단독으로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
- 2) 한 학급 전체가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경우

A.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51

학생이 정기고사 직전에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의 힌트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 1) 한 학생이 단독으로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
- 2) 한 학급 전체가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경우

A.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52

학부모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의 내용(예 발명특허, 교외 대회 참가 사실 등)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제5조 제10호), 질의한 사항이 해당 학교의 학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인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Q53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학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 1)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제적대상자의 제적을 유예하고 추가 등록기간을 제공하여 등록금 수납
- 2) 정해진 휴학기간 내 휴학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일반휴학을 승인
- 3) 정해진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의 분할납부 승인
- 4) 등록금 반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
- 5) 학생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장학 대상자로 추천 및 장학금 지급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참조)
- 사안의 경우 학생의 요청 또는 장학 대상자 추천 행위 등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학칙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Q54

교육과정 일환으로 학생들이 조리실습에 사용할 재료를 각자 준비하고 조리한 음식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시식할 경우 그 재료비가 3만원 이하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움. 다만, 관련 수업의 취지와 내용, 재료의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시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A출판사에서 비매품으로 제작한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 A출판사에서 5만원 상당의 교사용지도서 등 참고용 도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바,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임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 270-6035)

I.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18. 12. 24.) 개정
 -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관련 행위 기준의 구체적 제시 및 금지 조항 신설
 - 해외 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조항 신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2019. 1. 7.) 개정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
 -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에 신설규정 추가
- 이에, 우리 교육청도 주요 개정내용을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3조의3 신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 공무원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행위 금지
- 공무원이 소속 하급기관에 대한 업무·전가 및 비용, 인력부담 부당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이 소속 하급기관의 권리·권한 부당제한 및 의무 없는 부당행위 금지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4 신설)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됨.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거부했음에도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하고 책임관은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감독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서식(별지 제17호의9 서식)

다.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개정)

현재 4개인 상담 대상 행동기준(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2개 행위기준 추가

라. 교육(제22조 제4항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알선·청탁등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과 김현준 주무관 ☎ 270-6035)

I 개념 및 중점 기준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18.7.5.)에서 제시한 개념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권익위, '18.10.)

□ 갑질의 판단 기준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공무원의 위법·재량권 남용은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공법상 직권 남용¹⁾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갑질 유사대체 용어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18.10.)
- 직장내 괴롭힘(국회환경노동위 '근로기준법개정안 검토보고서', '18. 8.)

* 주 :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불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대법원 2012.1.27.선고 2010도 11884판결)

- ▶ **갑질 행위 판단 중점 기준** ⇒ 갑질을 직무상 권한 남용과 부당 행위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에 근거)로 보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위·권한 남용과 부당 행위(이하 '갑질')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행위별 갑질 해당여부》

기속적 행정행위	⇒	위법한 집행	⇒	갑질○
			⇒	갑질×
	⇒	적법한 집행	⇒	인격적 모멸감
재량적 행정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	갑질○
			⇒	갑질×
	⇒	재량권내	⇒	직무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
기 타 (행정지도, 행정조사, 사실행위 등)	⇒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인격적 모멸감	⇒	갑질○
			⇒	갑질×

《교육분야 갑질 주요사례》

구분	이익 추구형	불이익 처우형
기관간	· 부서 회식 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	· ○○학교 교감이 소속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모욕적 발언
기관내	· ○○학교 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	· 상급자의 하급자에 폭언·폭행, 성추행·성희롱
특수 관계	· 교수가 학생의 평가·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교수가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

Ⅱ 세부 추진 내용

1 피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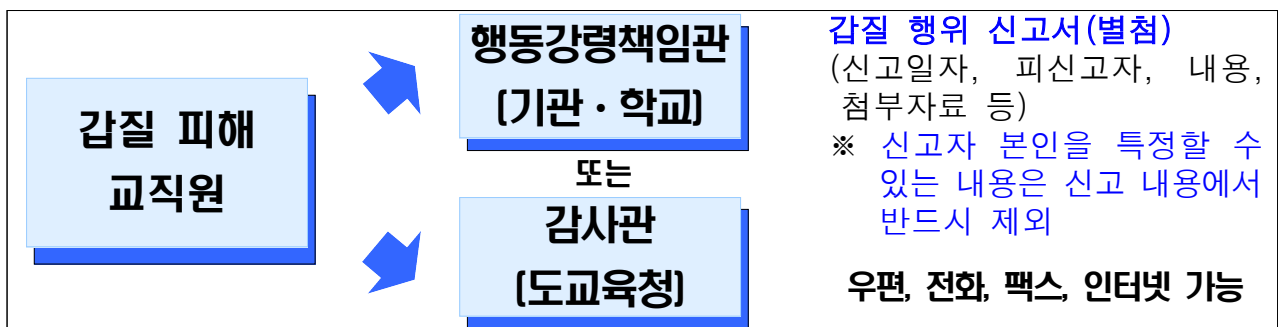
① 갑질 피해 신고 상담 창구 구축

□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 및 신고

- 총괄 : 감사관
- 기관·학교 :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기관별	갑질전담책임관(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
본청 부서	감사관
직속기관	총무과장(없는 경우 총무부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각급학교(유치원)	교감·원감(없는 경우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 신고 방법



○ 갑질 전담 책임관 역할

-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 접수 및 실태 점검·처분
- 갑질 피해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전문 상담 등 치유 대책 마련
-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등 관련 업무

□ 갑질행위 신고센터 구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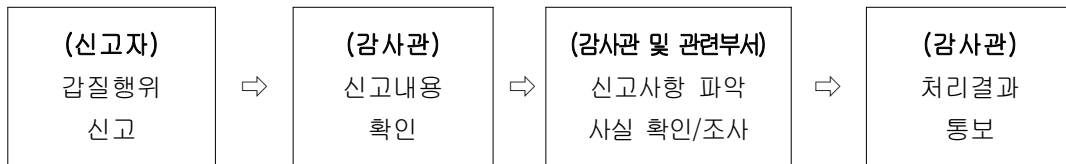
- 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갑질행위신고센터
(☞ <http://www.jbe.go.kr/main/board.jbe?cmsid=101020620000>)
- 갑질행위 신고센터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갑질행위 신고 대상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공무원
- 폭언 등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과도한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

○ 처리절차



※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확인 후 필요시 감사 실시

○ 갑질행위 등록사항 처리

갑질행위 신고사항은 감사관실 전담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

○ 갑질행위 신고센터 이용(예시)

상담	갑질 행위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성희롱·성폭력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기타		갑질행위 신고

2 보호 지원

① 갑질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철저(중점주친)

- (피해자 보호) 갑질피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게 대해 엄중 문책
- (2차 피해 모니터링) 신고·지원센터에서 인적사항 유출에 유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 피해자,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 유통에 주의 철저

② 갑질피해자 회복 및 예방 지원(제도개선)

- (법률·상담지원) 갑질 피해 회복을 위한 내실있는 상담 지원 추진
 - 신고·지원센터와 법무담당의 연계로 갑질피해신고시 법률상담 지원
 - (스트레스·치유지원) 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치유 지원
 - 교직원 직무 스트레스진단·상처 치유를 통한 갑질 원인 요소 차단
 - 내용 : 직무스트레스(개인별/집단별/직종별) 진단 및 치유 연계 지원
 - 대상 : 공무원 및 직종별 확대(검토)
- ※ 교원(교원인사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 등(행정과, 해당부서)

3 교육 강화

① 전직원 갑질 근절·예방 교육(즉각추진)

- (전직원 연수) 매년 1회 이상 갑질 근절·예방 교육 실시
- 기관별(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대상별(상·하급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특성을 고려한 주기적 교육 시행

대상별	실시 방법
기관(부서)장, 학교장(원장)	· 공직자 청렴특별 교육시 실시
소속 직원	· 기관(학교)별 자체 교육

※ 주요 내용 : 갑질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해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의 예방교육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교육시 갑질 행태 예방 근절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도 인정

○ (맞춤형 교육) 학교 구성원 갑질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원·강사·운동부 지도자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갑질 대응 교육
- 학생·학부모에 갑질 대응 교육 및 갑질피해신고 처리 등 안내

※ 예시) 학교 운동부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분담금에 관한 사항, 운동부 운영계획, 입학비리 근절 방향, 갑질행위 신고 방법 등 철저히 안내(교육부 중점 추진사항)

○ (교육 홍보) 업무포털 업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② 갑질 근절·예방 교육훈련 운영(제도개선)

○ (교육훈련) 3일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시 갑질 예방 교육 실시

- 교육프로그램상 청렴·부패방지 연수시 갑질 예방 교육 포함

※ 신규 임용, 중견관리자교육, 교육정책이해연수 등 직종별 연수프로그램에 갑질 예방 포함 운영

III 행정 사항

○ 갑질 행위 근절 및 예방 교육 실시(각급학교)

- 기관(학교) 대상별 갑질 예방 직장교육(연 1회 이상 의무)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교육과정에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포함 운영 가능

※ 향후 복무점검, 감사 등에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예정

갑질행위 신고서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피신고자	
제목	
내용	
첨부자료	1. 2.

갑질행위 접수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 내용	처리결과 접수/처리완료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피신고자: 소속 직위(급) 성명 - 신고내용: - 갑질유형: 1.() 2. ()	

※ 갑질 유형

-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선발된 직원에 대해 상사나 그 가족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
* (예시) △개인모임 동원(운전 포함) △업무와 무관한 지시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 공적인 지시 또는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 폭언 등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 등을 주는 행위

사례

2015~2018학년도 운동부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훈련경비, 대회경비, 후원회 경비 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지 않았으며,
2015~2018학년도 현재까지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계획 및 결과를 정보공개통합홈페이지(<http://open.jbe.go.kr>)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메 모



메 모



메 모

